

제15차 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위원 김 희 은

I. 회의 개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이하 ‘자문위’)는 지적재산권 범죄 집행에 관한 회원국의 노하우 공유 및 집행 성과 공유를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1회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2022. 8. 31 ~ 9. 2 개최된 제15차 자문위는 2019년 9월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방식의 자문위로서,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회원국의 경험 공유 및 지적재산권 존중 의식 제고를 위해 각국이 진행한 캠페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II. 주요 논의사항

1.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정책 및 법체계 공유

가. 온라인 IP 침해 대응방안

(비디오 게임 저작권 침해에 관한 토의)

우리 대표단은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비디오게임 산업은 젊고 글로벌 하며 빠르고 고도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성공적인 산업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관련되어 있다. 대표단은 분야별로 복제(cloning), 에뮬레이터 및 ROMs, 모딩(Modding), 사용자 창작 콘텐츠 등의 분야로 구분해 지식재산 관련 이슈를 설명하고, 그 특성을 고려했을 때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소송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는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과 관련해 비디오 게임에서의 저작권격권(게임제작자) 등 지식재산 문제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질문하였고, 대표단은 엄밀하게 게임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완전히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답하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수준으로 볼 수는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칠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IP 집행 및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대응할 능력이나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표단은 질문의 취지에 공감하며 중소기업 나름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스페인의 디지털 환경에서 IP 침해대응을 위한 행정절차 및 자기 규제) 지식재산권 보호는 스페인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지재권 보호를 위해 스페인은 2012년 지식재산위원회 제2과를(S2CPI) 설립해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S2CPI는 지식재산법 통합협정문 제19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어서 스페인은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소개하면서, 행정절차의 목표는 온라인 IP침해가 자발적으로 철회되는 것인데, IP권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S2CPI가 확인하게 된다.

최근 개정된 지식재산법에 따르면 정보사회서비스 법에 따라 주인을 모르는 웹사이트는 사법부 승인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접속이 차단된다. IP 침해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최초 행정결정이 내려지고, 48시간 내에 불법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이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된다. 스페인은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방지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나. 지재권 집행 공조

(브라질의 불법복제 및 지식 재산 범죄에 관한 대응노력) 국가영화기구(National Film Agency)의 역할은 브라질의 시청각산업을 진흥하고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시청각 불법복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브라질은 자국이 불법 시청각 콘텐츠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불법 콘텐츠 유통은 연간 5백만 달러에 추정되는 비용을 야기하고, 세수손실과 같은 사회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가영화기구의 주된 불법복제 방지활동으로는 우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 간 저작권 침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율하는 것이 있고,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응해 경찰조사와 집행을 지원하는 것이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의제, 협력개선, 원조활동 확대, 인식제고 활동)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이지만 매년 5,000여 개의 위조품이 압수되는 등 위조품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다. 이

러한 배경에서 카자흐스탄은 2021~2023년 포괄적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였고, 품질이 불량하거나 위조된 물품 구매로부터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조치가 현재 시행 중이다. 또한 위조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재정부, 내무부, 정보사회부 등 범부처간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라벨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담배에 의무화되는 등 위조품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카자흐스탄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관행을 채택하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경조치에 있어서 칠레관세청의 역할과 경험) 칠레는 2017년 지재권법 개정을 통하여 관세당국으로 하여금 상표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은 간단한 조사 후 확실한 경우에는 출시를 중지하고, 권리자에게 잠재적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통보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10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사례는 전통적인 물품에서 전통적이지 않은 물품(자동차 부품 등)으로 진화해왔다. 규제와 법집행기구간 협력은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데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건, 환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권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조품 관련 움직임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특허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출범 및 주요 수사 사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다양한 정부부처의 행정담당자들에게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범죄수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특허청은 상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산업재산조사과 내에 특사경을 처음 신설했다.

2019년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특허, 디자인 등의 분야에도 특사경을 도입해 특사경 활동 범위를 넓혔다. 2021년에는 기술침해수사를 전담하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를 신설하였고, 수사인원도 2019년 4월 6명에서 2022년 현재 22명으로 증원되었다. 현재 수사범위는 특허, 영업비밀 그리고 디자인 침해이다.

수사절차는 사건에 대해 신고가 있으면 수사관을 배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이다.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형사입건된 건수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까지 948건에 달한다.

특허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쓰이는 첨단설비 중 하나인 OHT (Overheated Hoist Transport)의 사례를 들며 특사경에 의한 수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 검찰의 역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지적 재산(IP)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정부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고, 국제조약에 가입하면서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대검찰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식재산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형사처벌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므로 기소중지 등의 대안도 모색해왔다.

현재 특허법 등에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정이 있으나 이전에는 지식재산 범죄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2015년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가 설치되었고 선임검찰이 배치되었으며, 복잡한 지식재산 사건의 경우 대전지검으로 당사자 동의 하에 이송하는 등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문체부, 특허청, 국가

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을 해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고 있고, 지식재산 범죄 중재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의 중재를 활용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존중 담당관 프로그램 소개)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 주도로 설립된 ‘지식재산존중 담당관 프로그램(Intellectual Property Respect Officer Program)’은 지식재산존중 인력양성 사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공 및 민간기관 전반의 지식재산권 인식 수준 향상, 법률 준수, IP 보호를 목표로 한다.

SAIP-WIPO 아카데미의 IP 정책교육과정을 수료한 지식재산존중 담당관은 소속기관의 IP 인식 수준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SAIP 협력으로 기관별 IP 정책을 수립하고 직원 대상 IP 컨설팅 제공, 정기보고서 발행 등을 통해 IP 법률과 규정이 준수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1단계 교육 및 실무연습을 포함한 자격취득 과정, 2단계 성과달성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76개 정부 기관이 본 프로그램에 가입하였다. 향후 2022년 말까지 미가입 상태의 정부기관 및 스포츠클럽의 가입을 장려하고 2023~

2024년 민간분야로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세계관세기구의 Container Control Program) 2004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관세기구(WCO)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설립된 컨테이너 컨트롤 프로그램(Container Control Program, CCP)은 불법물품의 국경을 넘는 이동방지를 위한 해상, 육상, 항공화물에 대한 위협관리, 공급망 보안강화, 무역 원활화 등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CCP는 의류, 화장품, 담배, 장난감 및 전자제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선적물을 압수하였다.

CCP는 피해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법률 부재를 현 상황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점검하고 IP 침해 물품의 압수를 가능케 하는 관련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이 어려운 또 하나의 요인은 민간·산업 차원의 관심 및 지원 부족임을 지적하며, 가령 CPP를 통해 IP를 침해한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브랜드 소유자가 항의하지 않으면 당국이 관련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브랜드 소유자가 무관심한 상황에서는 물품 압수로 인해 저장공간 낭비만 초래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CCP는 브랜드 소유자 대상 지적권 인식 강화 세미나와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압수 컨테이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가별 주요 브랜드와 연락망을 구축하여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다. 지재권 집행에서 중개자의 역할

(저작권 온라인 집행에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과 운영자의 역할(문체부 신탁기금 연구사업)) 문체부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저작권 집행에 초점을 두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Domain Name Service, DNS) 제공자를 대상으로 적용가능한 규제 제도를 검토하였다.

현재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DNS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작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이트의 경우 도메인 네임 레지스트리(Registries), 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자(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자(Domain Name Registrar), DNS 리졸버(Resolver) 등 DNS 제공자가 침해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단은 “무과실” 금지명령구제(no-fault injunctive relief basis)를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라고 언급하며,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와 도메인 네임을 비활성화, 차단조치할 것과 리졸버 침해 사이트의 IP주소 변환을 금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예방적 조치로 레지스트란트(registrant)가 소유권 등록 시 DNS 제공자측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방식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비하는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통보자(Trusted Notifier/Trusted Flagger Arrangement) 제도 활용 등 DNS 제공자의 자발적인 조치를 권장한다.

(영국의 위조품 거래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 사례 ‘Real Deal Campaign’) 2009년 지재권보호를 위한 전국시장단체(National Market Groups for Intellectual Protection, NMG)에 의해 설립된 Real Deal Campaign은 영국 국내의 시장과 베틀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품 근절을 목적으로 시행된 인식제고 교육 이니셔티브로, 민간 기업의 자금지원과 공공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cross-sector partnership)이다. NMG는 거래표준위원회 공무원을 위한 지재권 집행 교육용 툴킷을 제작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AIM 유럽 브랜드 협회-위조품 근절에서 중개자의 역할) AIM은 중소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 이르는 2500개 브랜드 상품 제조사를 대표하는 유럽 브랜드협회(European Brands Association)로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브랜드 권리와 온라인 중개자의 협업을 강조한다.

고객 정보 파악을 위한 적절한 실사, 거래약관에 지식재산 보호 조항 포함, 효과적인 통지 및 게시 중단 조치 시행, 위조제품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신속하고 영구적인 게시 중단 처리, 반복적 침해자 정책 시행 등을 제안한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음반산업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중개자의 역할)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s, IFPI)의 2021년 소비자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무허가 출처를 통해 음악을 감상하거나 입수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적인 경로로 음악을 청취하는 비율이 16~24세 사이의 청년층에서 무려 38%로 증가했다고 강조하였다.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과 발매 전 불법복제 및 무단배포는 음반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현재의 통지 후 게시 중단(notice and takedown) 환경에

서는 불법복제로 인한 음반업계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FPI는 온라인 중개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을 맞이하며, 면책조항의 적용조건에 대한 명확한 파악, 강력한 고객확인 의무(Know Your Business Customer, KYBC) 실시, 투명성 개선 및 반복적 침해자 정책(Robust Repeat Infringer Policies)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호스트 업체가 두더지 잡기(whack a mole) 게임처럼 재생산되는 불법복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번 삭제 조치된 저작권 침해물이 향후에도 재게시 되지 않도록 삭제상태를 유지하는 통지 및 차단 유지(notice and stay down)을 제안하였다.

(DHL Express와 글로벌 세관규정 프로그램) DHL Express는 세관규정준수를 기업문화의 핵심요소로 윤리적 책임을 다하며, 규정에 어긋난 물류방지를 위해 예방적 조치(엑스레이 검사, 선적전 검사, 데이터 분석 등)은 물론 글로벌 세규정 프로그램(Global Customs Compliance Program)을 설립하였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운송 방지, 과소신고 방지, 정확한 물품정보 제공, 정확한 배송정보 기재 등을 4대 목표로 언급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스터카드의 지재권침해방지 이니셔티브) 마스터카드는 자사의 불법 복제 방지 정책(Anti-Piracy Policy)으로 비즈니스 위기 평가·방지 프로그램(Business 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 BRAM), Mastercard Alert to Control High Risk (MATCH)를 소개하였다.

불법행위 조사를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BRAM은 권리자 또는 지재권 집행기관이 잠재적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불법행위 관련 거래 추적 및 결제 승인 내역 확인을 통한 매입(Acquire) 또는 고객 신원 파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MATCH는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점을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매입사에 공유하는 제도로 정보의 사전 고유를 통한 상점에 대한 평가 및 검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단, 본 제도는 매입사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특정 상점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라. 지재권 집행에서 새로운 기술

(EUIPO, 지재권보호와 집행을 위한 새로운 기술적 기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위조품 대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지재권청(EUIPO)이 진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위조품과 저작권 침해 물품이 세계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제3국으로부터 EU 수입품의 5.8%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UIPO는 2023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위조상품을 추적할 수 있는 실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2022년까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솔루션의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마치고자 함을 밝혔다.

(텐센트, 기술혁신을 통한 중국의 저작권 보호 촉진) 블록체인, NFT와 같은 신기술의 출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침해가 등장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에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저작권의 전 단계, 즉 창출, 활용, 사업화, 보호, 관리 단계에서 신기술을 적용하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창출 단계에서 타임스탬프, 디지털 워터마크,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적용으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Shenzhen의 Qianhai 법원은 블록체인, AI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Zhixin IP Cloud 재판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재권 재판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기술과 산업의 진화에 따라 입법 및 기술 또한 이에 부응하여 전향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재권 침해 사건의 판결

(인도, 동적 금지명령 및 가처분) 지재권 재판에서 금지명령(가처분)은 중요한 요소이다. 인도는 권리자들을 위한 금지명령 발령에 친화적인 국가인데, 침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금지명령이 존재하며, 지재권 분쟁에서 판결 절차의 일부로 금지명령이 존재한다.

소셜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의 진화로 지재권 침해의 본질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기존과 전혀 다르게 분화되었고, 기존의 금지명령 또한 실효성을 잃게 되어 새로운 형태의 ‘동적 금지명령’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침해 콘텐츠 차단을 위해 특정 URL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단 몇 초 만에 동일한 콘텐츠를 새로운 URL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특정 URL을 대상으로 한 금지명령이 무력화되었다.

동적 금지명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다수의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을 가능케 하나, 비례의 원칙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지재권보호협회(AIPPI),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AIPPI는 판매 외의 지재권 침해(수입, 보관, 제조, 사용

등)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연구를 2019년에 진행하였으며, 2021년의 후속 연구에서는 손해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인지 여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비판매침해의 핵심은 잠재적인 판매 가능성에 근거하여 잠정적인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침해제품의 가격, 손실된 로열티, 정신적 피해, 회전을, 특허제품에 대한 수요, 생산 비용과 규모, 권리자의 신용 하락 등을 고려하였다.

(국제상표협회(INTA), 예비 가처분 입법의 조화에 관한 연구) INTA는 47개국에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예비적 가처분(사전적 금지명령)의 다양한 기준을 식별한 결과, INTA가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기준을 정하고 2020년 INTA 이사회는 이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효과적인 집행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예비적 가처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를 포함한다.

2.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활동 및 캠페인 경험 공유

(덴마크의 위조상품 방지 인식 제고 활동) 덴마크는 2019년 1월, 위조 및 불법 복제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정품 구입이 좋은 이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식

제고 웹사이트(www.ichoosereal.dk)를 개설하였다. 위 웹사이트는 정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소비자 가이드를 제공한다.

(일본의 위조품 구매 및 판매 방지 캠페인) 일본은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2004년 8월 위조방지 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2020년 4월 일본 특허청으로 편입되어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매년 위조방지 캠페인을 실시하며, IP 보호의 중요성과 위조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해외 위조상품 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상표법 및 디자인 법을 개정하여 외국 사업자가 국제 우편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위조상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관세법도 개정하여 2022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말리의 산업재산권 진흥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 말리의 지식재산 증진을 위한 센터(CEMAPI)는 2012년 조직되어 지재권 보호 증진, 잠재적 지재권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및 인식프로그램 구현, 위조 및 부정 경쟁 방지 등 지식재산 존중과 국가역량 구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치안관사, 법무관,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말리의 지재권 존중 구축에서의 역할과 책

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IP 청소년 대회를 개최하여 젊은 층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위조방지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멕시코는 불법 복제물 근절을 위해 상공회의소, IP 권리자 및 기업협회로 구성된 실무자 그룹을 구성하여 불법 복제 근절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지재권 인식 제고 및 합법적인 자산의 안전하고 적법한 사용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는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고, 기존 침해 목록에 영업비밀 위반 및 도메인 네임이 추가되었다.

(나이지리아의 산업재산권 및 혁신 진흥 인식 제고 활동) 나이지리아 당국은 IP보호 및 사용을 장려하고, 혁신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산업재산권 및 혁신 진흥을 위한 기관(AN2DP)을 설립하여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오만 지역사회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지재권 인식 제고 캠페인) 오만은 학교 및 혁신부에서 학생 연령에 따라 상호작용이 활발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지재권 전반에 대해 훈련 받은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학생들이 새

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의 WIPO 소비자 설문조사 키트를 활용한 소비자 인식 조사)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IP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WIPO는 필리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신탁기금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응답자는 기타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지역에서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농촌과 도시지역의 모든 사회경제적 범주에 속한 18~65세의 고용 및 실업자 남녀가 선정되었다.

조사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등 정품 구입 방법을 알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무료 불법 복제물을 얻는 방법도 알고 있으며 해당 방법을 사용한다고 인정하였다.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과 편리함이며, 정품을 구할 수 있는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 복제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태국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활동) 태국은 자문센터(IPAC)를 설립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든 IP 상담 및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 고등교육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기술혁신 지원센터(TISC)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IP 관리 및 특허 검색 관련 역량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WIPO 지원을 통한 국가별·지역별 실무교육 성공 사례

(알바니아의 지식재산권 범죄 조사·기소
에 대한 WIPO 교육자료 맞춤형) 알바니아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와 같은 IP 침해 활동이 마약 밀매만큼 수익성이 높다고 인식하여 매뉴얼 개발을 결정하였다. 본 매뉴얼 개발의 목적은 알바니아의 경찰·관세기관·검사·판사 등 다양한 기관 내 법 집행 관련 전문가 그룹 역량을 구축하여 지재산권 집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TRIPS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알바니아 형법 및 주요 저작권·산업재산권 관련법 등 국내법에 맞춤형 매뉴얼을 제공하며, 주로 수사관, 검사 판사가 수사와 재판 양상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지재산권 집행에 대한 WIPO 아랍어 사례집 지원) 대부분의 아랍 지역에서 지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부재하여 지재산권 관련 법률 및 법원 결정을 다루거

나 분석하는 아랍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WIPO 지식재산존중국은 아랍 지역 지재산권 관련 판결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주요 사례 및 모범 사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WIPO의 지식재산존중국에서 아랍어 사례집을 제작하였다.

본 사례집은 주로 상표 및 저작권의 민·형사상 집행을 다루며, 이외에도 부정경쟁·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제재(형사조치) 및 손해산정(민사 구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III. 회의 참석 소감

1.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정책 및 법체계 공유’ 관련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하여 많은 회원국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점이 인상에 남았다. 다른 회원국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존재하나, 우리나라처럼 특허청 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허청이 수사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발표하자, 많은 회원국들이 위 제도에 관한 질문을 하여 우리의 제도가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 선구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가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동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자,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동적 금지명령은 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콘텐츠를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다른 URL로 옮기는 것이 쉬워진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집행수단이다. 다만,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인터넷과 블록체인, NFT 등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저작권 집행 수단을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업데이트 해야 하는 니즈를 많은 회원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활동 및 캠페인 경험 공유’ 관련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활동 및 캠페인

경험 공유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국가들의 토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지식재산권 집행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 자체를 보지 않도록 위해서는 인식 제고가 중요함에도 위 부분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 집행뿐만 아니라 인식 제고 활동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말로 예정된 제16차 자문위에서는 인식 제고 활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